

보도설명자료

(’21. 4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자동차업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
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, 정부는 현재 기활법
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

(서울경제, 4.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(3.31)에서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업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,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
- ◇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(위원장 문성현)를 중심으로 노사,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항
- ◇ 현재 산업부에서는 인력조정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
- ◇ 4.2일 서울경제 <내연 → 전기차 전환 때 ‘인력조정’ 허용 검토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가 자동차 업계와 만나 자동차 업종의 탄소 배출 절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(3.31)에서 업계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로의 사업 전환시 인력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
- 산업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자동차 업계와 산업부는 탄소배출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(3.31)를 개최함
 - 이 자리에서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업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,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산업부에 건의함
-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(위원장 문성현)를 중심으로 노사,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
 -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항임
 - 산업부는 인력조정 예외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

※ 문의: 이민우 자동차과장(044-203-4320) / 주미나 사무관(044-203-4326)